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4
----------	-----

2025. 4. 30.(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용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용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식품명 및 광고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특히 어린이들이 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연령층의 마약 범죄 증가로 인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마약류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및 개선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마약’이라는 용어가 일상에서 가볍게 소비되는 현상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등 미성숙 계층에게 마약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제도화하고 도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본 조례안은 마약 관련 범죄예방 및 도민의 의식 함양 차원에서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나. 조례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의 언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규범적 조례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상위법과의 내용적 충돌이나 중복 우려 없음.
- 공공기관의 책무 부여 및 도민 홍보활동 등은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규율 가능한 사안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정권한)에 부합하며 법적 타당성이 확보됨.
- 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및 추진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 포장 교체 등에 비용 지원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함.
-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5. 4. 15. ~ '25. 4. 2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각 조항은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어 정의 및 집행체계(도지사의 책무, 협조 요청 등)가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제4조 및 제6조에서 제시된 실태조사·홍보·인센티브 조항은 실제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기능 가능함.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마약류 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일상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 및 도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려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번호	제914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용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4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박용규,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변종오,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식품명 및 광고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특히 어린이들이 이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연령층의 마약 범죄 증가로 인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마약류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 개선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충북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및 개선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지원 및 협력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품국 식의약안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정책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사업) 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5의2.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13.>

8. 삭제 <2018. 3. 13.>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

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 6.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원료물질취급자”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8. “군수용마약류”란 국방부 및 그 직할 기관과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 9.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비용지원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시·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충청북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제11조제1항 관련)

1. 사업개요

○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충청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상품(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9조(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 내(1년)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 마약 관련 업체 간판 교체 비용 약 200만원, 메뉴판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도내 마약 용어 사용 접객 및 제조 업소 총 24개소)

나. 추계 결과 : 6천만원 (시군 식품진흥기금 100%)

- 충청북도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간판 4천 8백만원, 메뉴판 1천 2백만원으로 총 6천만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산출내역 : 간판 교체 비용 200만원 x 24개소 = 4,800만원
메뉴판 교체 비용 50만원 x 24개소 = 1,200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군비 (식품진흥기금 100%)